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91호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출자	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	제출년월일	2019. 3. 20.
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심 경 석

I. 제안내용

1.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주민의 생활환경의 향상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안 제1조 ~ 제4조)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구매·소유자운행 지원 등(안 제5조 ~ 제7조)
- 다.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라. 홍보·교육 및 기타(안 제9조 ~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추경편성 필요
-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9. 1. 31. ~ 2019. 2.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II. 검토 의견

가. 제정 배경

- 먼저, 동 조례안의 목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것임.
-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에는 NO_x(질소산화물), CO(일산화탄소), HC(탄화수소), PM(입자성 고형물질) 등이 있고,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 오존이 생성되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
-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이 포함됨.
- 먼저 해외 동향¹⁾을 살펴보면, 미국은 2050년까지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률을 전체 자동차의 27%로 보급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수소충전소 100기 구축 시점까지 초기 3년간 운영비의 약 50%를 주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 독일에서는 2023년까지 수소충전소 400기, 수소전기자동차 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영국은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1,000기, 수소전기자동차 160만대 보급하고, 일본은 2030년 수소충전소 900개소, 수소전기자동차 80만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1) 2018.10.31. 제17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스담당 공무원 정책 교육 자료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43만대를 보급하고 수소전기자동차 6.5만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급 확대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과 미국과 중국에서 도입한 ‘친환경자동차 의무 판매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특히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만개소, 전기충전소 1,000만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서초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소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664대, 하이브리드자동차가 6,304세대, 수소 전기자동차가 21대로 총 6,989대인 것으로 조사됨.
- ※ 2018년 11월 기준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
전국 54,715대, 서울시 11,162대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현황>

합 계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6,989대	664대	6,304대	21대

-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에 설치된 충전소가 63개소,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소가 64대소로 총 12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는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 2018년 12월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현황
전국 9,288기, 서울시 1,169기
- ※ 2018년 12월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현황
전국 15기(실제 개방운영 9기), 서울시 2기(서초구 1기 2018.5월 부터 개방운영중)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현황>

합계	전기자동차 충전소(급·완속)			수소전기자동차 (수소충전소)
	소계	공공시설	아파트	
128기	127기	63기	64기	1

나. 주요 내용 검토

1) 보급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보급시행계획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지원계획,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상위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초구 여건에 맞는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위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고, 구매비율은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에 따라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법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를 준용한 규정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에서는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대상은 서초구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지원을 받은 경우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법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구청장은 구매자에게 지원 의무는 없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명시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원을 받은 주민은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제한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제2항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4)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구청장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법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임.

- 다만, 안 제7조제3호 규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만 규정되어 있어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조속한 개정이 요구됨.

5)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안 제8조제1항과 제2항에서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충전 시설 설치대상)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15개 용도별 건축물(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기숙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중에서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11조의2 제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규정인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제3항에서 구청장은 충전시설의 보급·확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의 방식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법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으로,
최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서초구 여건에 맞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Ⅲ. 참고자료

1. 관련 법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지역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車種) 및 차종별 보급 물량
3.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財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 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시·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신규 구매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3.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판매시설
 - 마. 운수시설
 - 바. 의료시설
 - 사. 교육연구시설
 - 아. 운동시설
 - 자. 업무시설

- 차. 숙박시설
- 카. 위락시설
- 타. 자동차 관련 시설
- 파. 방송통신시설
- 하. 발전시설
-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나. 기숙사
3.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2.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 ② 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설치 여부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3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여부
 4.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서초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